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상 확대

전주시, 스쿠터·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재개약… 내년 3월 31일까지 혜택 제공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의존해 이동하는 전주시 등록 장애인과 노인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기입한 이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을 재계약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스쿠터, 휠

체어)를 운행 중인 등록 장애인·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기입해 개인별 별도 기입 절차는 없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과

부딪쳐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재계약 내용을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 가족,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전주시 누리집과 각 동 주

민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20여 개 지자체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험에 기입하고 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스쿠터와 휠체어 등 전동기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동기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전동기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은경 기자



사전투표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부부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인 지난달 31일 전주시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배우자 주은경 씨가 투표지를 받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제공

전주시, 복지부·국토부·LH전북본부 협의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27호 확보



시설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주택

으로 확보된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27세대와 청년 19세대가 함께 거주 장애

는 융합형 주거지(2022년 신축)로,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 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주거지원에 앞서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주택을 점검하고, 이후 LH 전북지사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후 올 상반기 10여 명의 희망 장애인을 이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에 총 20여 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

인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형을 개발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10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자립대상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진교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와 재활 중심에서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더불어 살며,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북환경청, 수도사업자 대상 운영·관리 실태점검

4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관내 수도사업자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점검과 가뭄 대응 비상급수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운영·관리 실태점검은 경쟁력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도내 14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인력 전문성, 정수시설 개선실적, 정수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우수기관은 포상금, 장관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최근 지속되는 기품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에 영향이 우려되는 섬진강 유역의 정수장과 도서지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비상급수체계를 점검한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급수 취약 지역인 도서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회 비상급수체계를 점검해 가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정수장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23. 4. 3. ~ 4. 30.)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총격기’ 등의 불법무기류이다.

김 서장은 본인 스스로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의 모든 신고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그 출처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소지하던 미갱신·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면제 혜택이 따른다.

김태형 전주덕진서장은 “불법무기소지자로 단속 될 시 총포·도검·회양류·등의 안전관리 관련법률에 의거 3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빠짐없는 자진 신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직원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완산구청을 찾는 모임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완산구는 민원·지적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해진 분야별 민원에 대응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응대 기술과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완산구 직원들은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을 구민들에게 보이며, 진정성 있는 행정 진행과 신뢰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진절한 모습속에 민원 민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은 더 큰 감동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